



시험장에서 보게될 지문을 미리 본다

공부가 하고싶어지는 책
행정학이 재밌어지는 책

2022
김종규
OX
파이널
선행정학

동영상강의 kaspa.co.kr

9급 / 7급 / 국회 / 공사·공단 / 군무원 / 경찰 / 승진

합격생 추천의 글

기출회독을 반복하다보면 문제와 답이 익숙해져서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걱정과 의구심이 들 때 OX 지문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객관식 기출을 공부할 때에는 전 지문을 다 알지 못해도 상대적으로 풀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OX 지문으로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공부가 가능했고, 판단력과 순발력을 길러 시험장에서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2021 국가9급, 지방9급 최종합격 김민지 –

시험이 몇달 남지 않았을때, 행정학의 방대함 속에서 헤매던 저는 압축 교재와 OX 파이널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OX파이널은 지문 자체가 아주 대표성이 있고 단순히 해설 뿐 아니라 관련된 개념 요약까지 있어 시험 하루전날 전 범위를 훑어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문을 하나하나 분석해가며 저의 약점을 파악하였고, 틀린 지문은 여러번 회독하여 눈에 익혔습니다. 이 과정은 실전시험에서 빠르게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었고 결국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기에 압축교재와 함께 꼭 추천합니다! 다들 파이팅하세요!

– 2021 국가9급, 지방9급 최종합격 전지원 –

1 행정의 개념 B

☆ 01 결정은 가치나 정치와 연관되고, 집행은 사실이나 행정과 연관된다.

02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 03 W. Wilson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정치가 아닌 경영과 같다고 하였다.

04 오늘날 행정은 정부에 의한 독점적 서비스 공급을 의미한다.

☆ 05 Goodnow는 행정을 국가의사의 결정(표현)이라고 하였다.

[결정-가치-정치
집행-사실-행정

..... 본질이다.

W. Wilson : <행정의 연구(1887)>
에서 정치행정이원론 주장

..... 의미하지 않는다.

..... 집행(실천)이라고 하였다.
Goodnow는 <정치와 행정(1900)>에서 정치
(결정)와 행정(집행)의 엄격한 분리 주장

2 재화의 유형과 공공재로서의 행정 A

☆ 01 요금재를 시장에 맡기면 자연독점 문제로 실패한다.

☆ 02 공유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이다.

03 공유재를 시장에 맡기면 비용회피와 과잉소비문제가 생긴다.

04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바람직한 수준 이하 또는 이상으로 공급된다.

☆ 05 의료, 교육 등 가치재는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사적재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 06 공유재는 비용은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집중되어 크게 느껴져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모든 재화를 시장에 맡기면 실패하는 이유]

공공재 : 무임승차, 과다·과소공급 때문
요금재 : 자연독점 때문
공유재 : 과잉소비와 비용회피로 인한 비극 때문

.....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적정수준의 공급 X

..... 사적재이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비용 : 분산-작게 느껴짐] <↑> 압도
편익 : 집중-크게 느껴짐

04 계급제는 전반적으로 융통성과 신분보장이 약한 제도이다.

☆ 05 계급제, 업관주의, 개방형 인사제도는 인사권자의 재량과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시킨다.

06 계급제는 해당직무에 책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07 계급제는 동일직무 동일보수의 직무급보수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4 직위분류제 A

01 실적주의, 과학적 관리론, 직무급 등은 미국 직위분류제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

☆ 02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다.

☆ 03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동일보수를 줄 수 있는 횡적인 직위의 군을 말한다.

04 직무평가에서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직위와 직위를 비교하는 상대평가에 해당한다.

☆ 05 점수법은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를 사용하고, 분류법은 직무 평가기준표를 사용한다.

☆ 06 직위분류제는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 07 직위분류제는 잠정적인 업무로 구성된 불확실한 직무상황에 적합한 제도이다.

☆ 08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구조로 환경대응성이 높다.

..... 강한 제도이다.

[인사재량 ○ : 계급제, 업관제, 개방형
but 계급제 ≠ 업관제 ≠ 개방형]

계급제 [해당직무에 책임자 임용보장 ×
융통성이 높아 적재적소배치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 : 생활급
직위분류제 : 직무급]

실적주의 + 과학적관리론 + 직무급요청 = 미국의 직위분류제 확립에 영향

..... 직위의 군은 직급이다.

[직급 : 종류 · 곤란도 유사
등급 : 종류는 상이, 곤란도 유사
직무등급 : 곤란도만 유사(종류 언급 X)]

[서열법 : 직위와 직위 비교
요소비교법 : 대표직위와 비교] 상대평가

분류법은 점수법은

[등급기준표 : 분류법
평가기준표 : 점수법] 절대평가

..... 확립에 불리하다.

[직위분류제 : 신분보장 ×, 직업공무원제 ×
계급제 : 신분보장 ○, 직업공무원제 ○]

..... 부적합한 제도이다.

직위분류제 [불확실한 직무상황 × (by 세분류)
환경대응력 ○ (by 개방형)]

직위분류제 [환경대응성 ○ (by 개방형)
공직경직성 × (by 개방형)
인사융통성 × (by 세분류)]

☆ 02 5급 이상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가입 직급제한 폐지
(2021.7.6. 「공무원노조법」 개정 시행)

03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에 포함
은 시킬 수 있지만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04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05 행정부의 정부 측 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다.

06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수리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조설립신고수리 : 고용노동부장관
노조전임동의 : 임용권자
정부측 교섭대표 : 인사혁신처장

07 공무원노동조합은 정책결정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08 6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과 특정직 중 10년 경력 미만의 외무
직, 경감 이하의 경찰,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직장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2019.12 법률 개정으로 경찰, 소방도 가입 가능

09 2022.1.1. 현재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 및 교육 공무원
(교원 제외)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가입대상(2021.7.6. 시행)]

	[충전]	[개정]
일반직	- 6급 이하	전직급
특정직	- 6급 이하 상당 외무직만	외무·소방· 교육(전직급)
별정직	- 6급 이하 상당	전직급 상당
퇴직자	- X	O

10 2022.1.1. 현재 퇴직 공무원도 노조규약으로 정하는 자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 07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대고객관계도 인간화될 수 있다.

.....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비인간화될 수 있다.

★ 08 정보화가 되면 분권화가 촉진되지만 집권화나 계층제적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

정보화 { 집권화 촉진 X
분권화 촉진 O
집권화 촉진될 수도 O

09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활용하는 정보지원시스템은 EDI이다.

..... ES(전문가체계)이다.

EDI = 전자문서 유통체계 = 전자자료 처리체계

10 정보자원 간의 관계를 연결·정리한 설계를 정부참조모형이라고 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라고 한다.

정부참조모형 :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표준화 한 것

★ 11 전자정부(행정정보화)기본계획은 5년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한다.

★ 12 빅데이터는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집합을 말하며, 크기, 속도, 다양성이 특징이다.

.... 비정형화된 데이터집합을

3V { Volume : 크기
Velocity : 속도
Variety : 다양성(정형 + 비정형)

13 정부24는 G2C, 온나라행정시스템은 G2G, 나라장터는 G2B에 각각 해당한다.

나라장터 = 전자조달시스템

{ G2B : 기업과의 전자거래(나라장터 등)
G2C : 국민과의 전자거래(정부24 등)
G2G : 정부내 전자거래(EDI 등)

14 초지능성, 초예측성,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과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 근본적인 속성이 다르다.

4차산업혁명 = 3초(초지능, 초예측, 초연결)

★ 15 「인사혁신처 예규」상 탄력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이 포함된다.

탄력근무 = 주40시간 범위내 시간적 유연성 부여

{ 탄력근무 : 시차출퇴근, 집약, 재량 등
원격근무 : 재택, 스마트워크

★ 16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구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정보기술아키텍처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마다 각각 수립한다.

{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 매3년, 과기부 장관
전자정부기본계획 : 매5년, 행안부장관
정보기술아키텍처기본계획 : 매3년, 행안부장관

* 「국가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2020.12)

17 전자정부 1.0은 유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부운영패러다임 1.0은 직접방문을 기반으로 한다.

{ 전자정부 [1.0] [2.0] [3.0]
유선; 무선; 유무선통합
정부운영패러다임 직접방문 유선; 무선;

18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 2020 기본계획(1차) : 2016 ~ 2020
2025 기본계획(2차) : 2021 ~ 2025

1 주민참여 B

☆ 01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상 의무화되어 있다.

☆ 02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도가 주민소송제도보다 앞서 도입되었다.

☆ 03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대상이 아니다.

☆ 04 2022.1.13. 현재 우리나라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구하여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간접발안에 해당한다.

☆ 05 19세 이상 주민은 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개폐를 직접 발의할 수 있다.

06 감사청구된 사항은 9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07 최근 중앙정부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 08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09 행정기구 설치·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반대 등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없다.

☆ 10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11 주민조례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12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 가능 연령이 최근 공직선거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지방재정법」상
2011 「지방재정법」상 의무화

..... 주민소송제도가 주민소환제도보다
주민소송 2006, 주민소환 2007

주민감사 청구 X { 수사·재판
사생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직접발안 : 주민투표로 결정
간접발안 : 지방의회가 결정

..... 18세 이상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 O
직접발안 X

..... 60일 이내에

[주민참여예산 : 2011 의무화
국민참여예산 : 2018 의무화(2019 예산부터 시행)

..... 200명을 넘지 않는

주민감사청구 { 시·도 : 300명
인구 50만 이상 시 : 200명
기타 시·군·구 : 150명

조례개폐 청구 X { 법령 위반
지방세·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 3년

..... 「주민조례발안법」에

주민감사와 조례개폐청구 연령은 공직선거연령과 동일하게 2022.1.13.부터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주민투표 등은 여전히 19세 이상이다.

[선거연령 : 18세 이상
주민감사청구 : 18세 이상
주민조례청구 : 18세 이상
주민투표청구 : 19세 이상

1 정부규제

- ①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의 존속기한(규제일몰제)은 원칙적으로 년이다.
- ②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 2**2 정책의제 설정상 오류**

- ☆ ①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거나 정책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오류는 중 오류이다.
- ☆ ② 문제를 잘못 정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오류는 중 오류이다.
- ☆ ③ 틀린 귀무가설을 인용하거나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오류는 중 오류이다.

 1

■ 옳귀기 - 1종오류

 3 2**3 비용편익분석**

- ☆ ① 순현재가치가 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 ☆ ② 편익비용비율이 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 ☆ ③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으로, 편익비용비율을 로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0순현재가치 : $B - C$ 1편익비용비율 : B/C 0 1

내부수익률 : B와 C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

4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 ☆ ① 쓰레기기통모형과 전제조건이 유사한 관료정치모형은 Allison의 모형 이다.
- ☆ ② 합리모형과 전제조건이 유사한 합리적행위자모형은 Allison의 모형 이다.

 3 1

37 주민참여제도

- ☆ ① 우리나라에서 주민청구제도는 년, 주민투표제도는 년, 주민소송제도는 년, 주민소환제도는 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명, 기타 시·군·구는 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 수 이상 연대서명을 거쳐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년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999 2004
2006 2007

18 300
200 150

「지방자치법」 2022.1.13. 개정·시행

3

60

18

1

「주민조례발안법」 제정(2021.10.19.)
시행(2022.1.13.)

38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

- ☆ ① 주민투표로 확정된 사항은 년 이내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물론 주민투표로도 변경할 수 없다.
- ② 지방의회는 재적 출석과 출석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 ☆ ③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득표로 확정된다.
- ☆ ④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주민은 일 이내에 상급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과반수 2/3

1/3

과반수

14

10

대 / 한 / 민 / 국 / 대 / 표 / 행 / 정 / 학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1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1년 12월 17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FAX. 02-532-5315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87870-95-1

값 12,000원

